

1960년대 번역된 ‘악서’의 문화정치*

채웅준**

1. ‘양서’ 시대의 ‘악서’
2. ‘악서’의 세 가지 기준: 문화적 근대화의 타자들
3. 지정학적 변화와 재편되는 문화적 정당성
 - 3-1. 일본 대중소설 번역물과 식민지 트라우마
 - 3-2. 한일 국교 정상화와 정당성 기준의 변화
4. ‘양서’ 체제의 균열과 대중문화로서의 ‘악서’
 - 4-1. ‘유리의 메커니즘’
 - 4-2. 민족의 교양과 개인의 쾌락
5. 교양 바깥 ‘악서’의 문화정치

국문초록

1960년대는 ‘양서(良書)’의 시대였다. 출판사는 ‘양서’의 생산으로 상징 투쟁에 참여했고, 정부와 함께 ‘양서’를 장려하는 제도와 정책을 강구했으며, 대중도 ‘양서’ 읽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그러나 ‘양서’를 중심으로 한 교양의 문화정치와 문화적 근대화 과정에서도 ‘악서(惡書)’로 낙인찍힌 책은 끊임없이 생산되고 소비되었다. 이 연구는 번역된 ‘악서’에 주목하여, 그것이 문화적 정당성을 박탈당한 과정과 그 사회문화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번역서, 특히 ‘악서’의 생산과 유통 과정을

* 이 논문은 연구자의 박사학위논문 「번역 출판의 문화정치와 사회적 상상: 1950년대 후반-1970년대 번역서의 미디어 사회문화사」의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한 글이다.

** 대한출판문화협회 연구위원

미디어 사회문화사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신문·잡지·정부 자료와 당시 번역서를 통해 관련 담론과 실천을 분석한다.

당대 ‘악서’의 기준은 내용적·장르적 통속성, 중역이나 무단 복제 등 비윤리적 생산과 유통, 원천 문화의 일본성에 있었다. 일본 대중소설 번역물은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표적인 ‘악서’로, ‘반일정책’이 막을 내린 4·19 이후 출판시장에 범람하면서 식민지 트라우마를 자극했다. 그러던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계기로 그 기준은 재편되었다. 이 지정학적 변화는 문화적 정당성의 기준을 ‘반일’이라는 민족적 감정에서 저작권과 근대적 출판 윤리의 문제로 이동시키는 계기였다. 이와 동시에 그것은 ‘양서’ 체제에 잠재해 있던 국가의 교양주의적 통제와 시장의 상업주의적 욕망 그리고 대중의 쾌락에 대한 요구 사이의 긴장을 수면 위로 드러냈다.

이 글은 ‘악서’의 문화정치가 지정학적 질서, 문화적 지배 집단의 기획, 시장 논리, 독서 욕망의 상호작용 속에서 역동적으로 발현되고 있었음을 밝힌다. 더불어 기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악서’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양서’ 체제의 한계와 균열, 그리고 민족문화와 근대화라는 담론 체계 바깥으로 향하던 상업주의와 대중의 욕망을 조명한다.

(주제어: 악서, 번역 출판, 교양의 문화정치, 문화적 정당성, 1960년대)

1. ‘양서’ 시대의 ‘악서’

국내 번역사(翻譯史) 연구의 선구자 김병철이 일찍이 이야기한 것처럼 1960년대는 국내 번역문학의 ‘르네상스’였다.¹⁾ 1958년과 1959년 정음

1) 김병철, 『한국 현대 번역문학사 연구(上)』, 을유문화사, 1998.

사, 을유문화사, 동아출판사에서 펴낸 세계문학전집의 대대적인 성공 이후 번역은 '봄'을 이루었다. 정전으로 추대받던 해외 문학은 각 출판사에서 세계문학전집을 비롯하여 특정 작가나 노벨 문학상과 같은 시상, 각종 주제를 중심으로 한 전집의 형태로 출간되었다.

이 당시 번역에는 세 가지 역할이 부과되고 있었다. 주요섭이 말하듯 “우리 문학을 외국 어문으로 번역하여 국제 무대에 내놓는 일”, “외국 문학을 우리글로 번역하여 우리 대중이 세계문학에 계속 접촉함으로써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일”, “순한문으로 씌어진 우리 민국 고전을 한글로 번역하여서 현대인으로 하여금 그 어려운 한문을 배우지 않고도 우리의 고유 고전을 이해”하도록 하는 일이 그것이다.²⁾ 1960년대까지 번역 담론의 초점은 대체로 해외 문화의 수용에 맞춰져 있었다. 정권을 비롯하여 대다수의 지식인, 잘 알려진 출판인과 번역가는 ‘세계적’ 작품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국내에 유통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창달을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 “일장월취하는 선진 제국의 문화를 수입하는 것만이 후진성을 극복하는 첩경”이라는 주장이다.³⁾ 바로 그런 ‘선진 제국의 문화’가 책의 형태로 출간되었을 때 ‘양서(良書)’라는 칭호가 부여되었다.

‘양서’는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한 근본적인 토대로 간주되었으며, 전 사회에 ‘옳은 것’으로 각인되어 문화적 근대화를 견인하고 있었다. 출판 장에서는 ‘양서’를 출간하기 위해 상징투쟁을 벌였고, 견고하고 고급스러운 체재를 갖춘 번역서가 쏟아졌다. 문인 외에도 외국 문학을 전공한 학자들이 번역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하여 번역의 전문화를 도모했다. 정부는 ‘우량도서’를 제도화하고 ‘자유교양대회’를 주최하는 등, ‘양서’를 교양의 문화정치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 출판사 광고, 정부의 정책, 법규, 대

2) 〈번역 문학의 문제(上)〉, 『동아일보』, 1957.1.16., 4면.

3) 〈번역과 오역〉, 『조선일보』, 1959.11.19., 4면.

중의 실천 속에서 ‘양서’는 만들어야 하는 것, 지원해야 하는 것, 읽어야 하는 것, 읽혀야 하는 것으로 각인되어 있었다. 이것이 1960년대 문화적 근대화를 향한 번역 출판 장의 일면이었다.⁴⁾

1960년대 번역 출판에 관한 회고에서도 당대는 ‘옳음’ 또는 ‘좋은’이 지배했던 시기로 평가된다. 출판이 “국가 건설에 필요한 인력 자원 개발에 기여하는 한편 ‘교양의 시대’를 창조하는 주체로서의 역할도 했다”는 식이다.⁵⁾ 또 1960년대 출판 윤리를 거스르는 책들이 범람했지만, 대한출판문화협회를 위시한 출판계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마침내 번역 출판 문화의 정화와 출판계의 ‘약진’이 이루어졌다고 논의되기도 한다.⁶⁾

그러나 사실 위의 발전론적 서사에서 특정한 역사적 사실들은 지나치게 축소되어 있다. ‘양서’에 온갖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된 1960년대라는 무대에는, ‘악서(惡書)’ 또는 ‘비정상’, ‘저질’, ‘통속’ 등 온갖 불명예스러운 수식과 함께 문화적 정당성을 박탈당한 출판물도 엄연히 공존하고 있었다. ‘양서’를 진흥하고 ‘악서’를 추방하기 위한 담론적·제도적 노력은 상당했음에도, ‘악서’는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읽히며 말썽을 일으켰다. 번역 출판의 눈부신 근대화로 향하는 길목에 나타난 ‘악서’의 인기는 이 시기의 번역 출판에 대한 단순화된 서술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음을 암시한다. 1960년대까지 번역 및 출판 문화의 발전을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르네상스’만이 아니라 ‘르네상스’를 가능케 한 사회적 조건과 그 빛에 가려진 그림자를 함께 바라보아야 한다. 천정환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

4) 채웅준, 「1950~1960년대 세계문학전집 생산의 문화적 근대성: 출판 장 및 번역 장 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과사회』 제27권 3호,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19, 5-60쪽; 채웅준, 「번역서의 문화적 정당성과 트랜스/내셔널리티: 1960~70년대 ‘양서(良書)’의 형성과 변화」, 『대동문화연구』 제128집, 대동문화연구원, 2024, 447-485쪽.

5) 한국출판학회, 『한국출판산업사』, 한울아카데미, 2012, 43-48쪽.

6) 이두영, 『현대한국출판사』, 문예출판사, 2015, 3-5장.

지의 자유교양대회를 분석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대중문화의 부산물”과 “불법 외설 출판물이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유신과 총력안보에 대한 ‘탈동원’이 아니겠는가”라고 언급한 바 있다.⁷⁾ 그의 질문은 이 연구를 전개해 나가는 데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 연구는 1960년대 ‘양서의 시대’에 ‘악서’로 불린 번역서가 ‘양서’ 못지 않게 활발히 생산되고 대중적 인기를 끌었던 모순적 현상에 주목한다. 문화적 근대화가 추진된 1960년대와 그 전후 그것의 타자였던 ‘악서’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탐구함으로써 ‘악서’의 문화정치를 기술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특히 번역된 출판물에 집중하여 ‘악서’의 정체와 그것을 규정하는 맥락, 나아가 ‘양서’의 동원으로부터 벗어난 실천의 문화정치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1960년대가 번역 출판의 활황기였던 만큼 당대 번역에 관한 연구는 적지 않다. 우선 앞서 밝힌 번역문화사, 출판문화사, 출판산업사 등 번역 출판에 관한 통시적인 연구들이 있다. 이 연구들은 기초 자료로 활용될 여지가 충분하지만, 당대 번역 출판을 근대화나 산업적인 발전이라는 틀에서 서술하는 데에 치우쳐져 있다. 둘째, 문인이나 문학 평론가의 번역에 관한 연구다. 구체적으로는 김수영,⁸⁾ 김현,⁹⁾ 전해린,¹⁰⁾ 그리고 〈사상계〉, 〈창

7) 천정환, 「교양의 재구성, 대중성의 재구성: 박정희 군사독재 시대의 ‘교양’과 자유교양운동」, 『한국현대문학연구』 제35권, 한국현대문학회, 2011, 309쪽.

8) 박연희, 「1950-60년대 냉전문화의 번역과 “김수영”」, 『비교한국학』 제20권 3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2, 101-139쪽; 박지영, 『번역의 시대, 번역의 문화정치: 1945-1969, 냉전 지(知)의 형성과 저항담론의 재구축』, 소명출판, 2018; 박지영, 「김수영 문학과 번역」, 『민족문화사연구』 제39권, 민족문화사연구소, 2009, 200-228쪽; 윤영도, 「김수영과 문화냉전: 《황하는 흐른다》의 번역을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역총간』 제39집, 중국어문논역학회, 2016, 143-163쪽; 조연정, 「번역체험이 김수영 시론에 미친 영향: 침묵을 번역하는 시작 태도와 관련하여」, 『한국학연구』 제38권,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459-490쪽.

9) 박연희, 「김현과 바슐라르: 1970년대 김현의 번역과 현대시 비평」, 『구보학보』 제20

작과비평》, 〈문학과지성〉¹¹⁾의 번역 실천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그런데 한 발짝 떨어져서 번역 문화에 관한 연구의 지형을 조망했을 때 문인 개인의 형상과 그들의 의식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있다는 인상을 지우긴 어렵다.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 번역은 외국 문학 전공자의 내기물이기도 했고, 대학생의 아르바이트이기도 했으며, 출판사의 돈벌이 수단이기도 했다. 번역 출판 문화의 전반을 조망하기 위해서는 문인을 제외한 다양한 행위자의 실천을 간과해서는 곤란하다. 그런 점에서 번역 출판 실천과 문화정치에 관심을 기울이는 연구들은 주목할 만하다.¹²⁾ 앞서 문인들의 번역 실천을 다룬 연구들과 달리, 이 연구들은 번역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와 출판이라는 미디어 제도의 효과를 논의에 포함하고 있다. 이로써 당대 번역 출판 문화의 다층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드러낸다.

집, 구보학회, 2018, 451-479쪽.

- 10) 박숙자, 「여성은 번역할 수 있는가: 1960년대 전혜린의 죽음을 둘러싼 대중적 애도를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 제38집,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5-42쪽.
- 11) 권보드래, 「『사상계』와 세계문화자유회의의 1950-1960년대 냉전 이데올로기의 세계적 연쇄와 한국」, 『아세아연구』 제54권 제2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2011, 246-290쪽; 임영광, 「1960년대 『창작과비평』 담론과 번역」, 『동서인문학』 제50호, 건국대학교 동서인문학연구소, 2015, 39-75쪽; 전우형, 「번역의 매체, 이론의 유포: A. 하우저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번역과 차이의 담론화」, 『현대문학의 연구』 제56권, 한국현대문학학회, 2015, 71-102쪽; 최진석, 「냉전기 한국 지식인의 번역 실천: 1960년대 『사상계』의 번역 자료 선별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제85집,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2, 157-192쪽.
- 12) 김종희 (2016). 「1960년대 출판문화와 여성지 연구: 부르디외(Bourdieu)의 장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의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지영, 『번역의 시대, 번역의 문화정치: 1945-1969, 냉전 지(知)의 형성과 저항담론의 재구축』, 소명출판, 2018; 이종호, 「1960년대 일본번역문학의 수용과 전집의 발간: 신구문화사 『일본전후문제 작품집』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21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15, 7-37쪽; 이종호, 「1960년대 〈세계문학전집〉의 발간과 전위적 독서주체의 기획」, 『한국학연구』 제41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77-102쪽; 이종호, 「1960년대 한국단편소설의 영어번역 양상 연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Korea Journal을 중심으로」, 『구보학보』 제28집, 구보학회, 2021, 677-708쪽.

그러나 문화적 정당성이 박탈된 책들, 당대의 용어를 빌리자면 이른바 '악서'에 주의를 기울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어떤 번역서가 어떤 이유로 문화적 정당성을 박탈당했으며, 어떻게 그토록 많이 '악서'가 생산 및 유통되었는지, 그리고 '양서'의 시대의 '악서'의 인기라는 이 역설에 관한 질문은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이 연구는 번역 출판의 상업적 성공과 근대화, 연구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번역 출판 장의 중심부에 있었던 문인, 지식인, 출판인의 실천에서 가려진 이면의 그림자를 밝혀내고자 한다. 즉 문화적 정당성을 박탈당했던 '악서'에 초점을 맞춰 출판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양서' 체제의 균열과 대중의 욕망을 조명한다.

선행 연구가 주로 지성사적 관점에 머물러 있다는 판단하에 이 연구는 사회문화사적 관점을 견지한다. 이 연구에서 사회문화사적 관점을 적용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가리킨다. 하나는 당대 지식 권력의 중심부에 있던 정권, 대형 출판사, 지식인, 문인의 인식론을 벗어나서, '악서'의 사회문화적 의미와 유통 과정을 살피겠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번역된 텍스트 그 자체보다는 번역 출판물의 생산과 유통이라는 국면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이다. 텍스트의 의미란 그것이 미디어 사물과 그 유통 과정의 특정한 질서 속에서 형성, 생략, 수정, 재구성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 글은 '양서'와 '악서'라는 당대의 명칭을 그대로 분석적 틀로 활용한다. '양서'와 '악서'는 명확한 지시대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 수사에 가까운 언표였다. 그럼에도 이 연구에서 그 명칭을 따르는 까닭은 일차적으로 문화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책과 박탈당한 책을 이룰 만한 마땅한 언어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당대에 실재했던 분류체계의 효과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양서'의 상징폭력과 그에 대한 '악서'의 의도치 않은 투쟁을 강조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책들이 정말 좋은가(혹은 나쁜가)'가 아니라, 그 이름

불임의 문화정치적 의미와 효과에 있다.¹³⁾

이 연구는 미디어 사회문화사적 관점에서 문헌 조사와 담론 분석을 수행한다.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1960년대이지만, 문화적 정당성의 분류 체계가 형성되기 시작한 1950년대 후반부터 그 이후의 변화를 살필 수 있는 1970년대 초반까지 전후 맥락까지 폭넓게 다룬다. 분석 대상은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번역 출판을 다룬 신문, 잡지, 정부 자료 등의 문서다. 자료는 ‘악서’, ‘통속’, ‘저질’ 등을 키워드로 수집하거나, 번역을 다룬 문헌 가운데 관련 내용을 포함한 것을 중심으로 수집했다. 이 기초적인 자료는 당시 번역 출판에 관한 맥락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출판사의 내부 자료나 구체적인 판매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출판사의 실천과 독자의 반응을 유추할 수 있는 간접적인 자료로서 기능한다. 다른 한 축은 번역서다. 앞서 밝혔듯 번역서를 분석 대상으로 다룰 때 이 연구가 주목하는 바는 텍스트로서의 번역서가 아니라 미디어 사물로서 번역서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사회적 과정과 그 사회문화적 의미다. 다시 말해 이 연구는 번역서의 내용이 아니라 그것이 번역서 내외부의 어떠한 질서 속에서 만들어졌는지를 분석한다.

2. ‘악서’의 세 가지 기준: 문화적 근대화의 타자들

‘악서’란 무엇인가. 앞서 밝혔듯 당대에 (‘양서’와 마찬가지로) ‘악서’가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악서’에 관한 담론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악서’가 민족문화의 기반이 되는 ‘양서’를

13) 다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양서’와 ‘악서’는 따옴표로 표기하고자 한다.

‘구축(驅逐)’하고 있다는 우려다. 크게 세 가지 요소가 문제시되었는데, 그것은 곧 ‘악서’를 판별하는 세 가지 기준이기도 했다. 통속적인 내용, 비윤리적인 출판 또는 유통 과정, 원천 텍스트의 출신이 그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1960년대 초중반 매우 유효하게 작동했다.

문학평론가 이철범은 “나쁜 책은, 한 권의 좋은 책 열 권을 무색케 하는 유행병과 같다”면서 “대중의 구미, 호기심, 에로만 자극”하는 책들을 비판한다.¹⁴⁾ 다음은 시인이자 영문학자였던 이하윤의 발언이다.

“근자에 번역 출판된 대개의 작품 내용이 일본에서 일시적인 선풍을 일으켰을지 모르나 <아프레>적이며 <비트·제네레이션>의 성 폭로에 속하는 것으로 하등 문제작일 수도 없고 따라서 그 가치가 그다지 높이 평가될 수도 없을 것인즉 이러한 책자의 출판은 그렇지 않아도 위축된 출판계를 더욱 위축시킬 따름[...].”¹⁵⁾

여기서 이하윤이 ‘문제작’으로 경고한 ‘아프레’란 전후(戰後)를 의미하는 프랑스어 ‘아프레게르(après-guerre)’를 가리킨다. ‘아프레게르’는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프랑스에서 나타난 도덕적 타락이나 범죄 행위, 성적 방종을 일컫는다. ‘비트 제너레이션(beat generation)’도 같은 전후 시기 미국에서 사용된 용어다. 풍요로워진 미국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규제가 나타나자, 그에 반항하려 하거나 또는 그로 인해 방황하던 ‘지친(beat)’ 세대를 일컫는다. 문학에서 ‘아프레게르’는 전후 성적인 문란함과 타락을 다룬 소설을, ‘비트 제너레이션’은 젊은 등장인물이 현실에서 도피하는 패배주의적인 내용의 소설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었다.¹⁶⁾

14) 이철범, 「문화적 독립을 위하여」, 『출판문화』, 1965년 2월호, 대한출판문화협회, 1965, 14쪽.

15) <일본 문학 번역과 작가>, 『경향신문』, 1960.10.12., 4면.

이하윤이 ‘성 폭로’를 언급한 데에서도 드러나는바, 1960년대 초반에는 성애 묘사가 다분한 소설이 다수 번역 수용되는 ‘에로 붐’이 일었고 비난의 표적이 되었다. 서구와 일본에서조차 선정성을 이유로 판금 조치된 D. H. 로렌스의 <차털리 부인의 연인>이 다시금 고개를 내민 것도 이때였다. 이 소설은 이미 1950년대 초중반 세종문화사, 동명문화사, 신명문화사 등에서 번역 출간되었다가, 1960년대에는 1961년 대문사, 1964년 동방사, 그 이후로 정음사, 문우출판사, 삼신서적, 국제문화사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출간되었다.¹⁶⁾ 신문원사에서는 1961년 세계성(性)문학전집을 발간하여 사드, 자허마조흐, 레아주 등의 작품을 실었다. 개중에는 <빠리의 창녀들>, <조용한 날의 정사> 등 자극적인 제목으로 출간된 책들도 있었다. 신문 광고에서 신문원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완벽한 세계 최고의 SEX문학!!”이라는 문구로 이 전집을 홍보했다. 사랑사 출판국에서도 1965년 세계비밀문학전집이라는 제하에 위 작품 중 일부를 실었다. 사랑사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잠 이룰 수 없는 흥미진진한 드릴과 섹스의 수소탄! <차털리 부인의 사랑>을 능가하는 이색 문학, 여기에 완전 번역! 재판 발행!”이라는 선정적인 문구와 파격적인 사진을 광고에 실었다.

추리, 첩보, 탐정 소설도 이른바 ‘장르소설’이라는 점에서 문화적 정당성 기준을 만족시키지는 못했던, ‘양서’라는 문화적 기획의 타자였다. “책을 읽는 37% 가운데에서도 만화, 탐정 소설, 잡지를 제거하면 정상적인 독서를 하는 학생은 겨우 5% 내외밖에 되지 않는다”는 독서 조사 기사처럼,¹⁷⁾ 이들은 1960년대 초중반 ‘정상적인’ 책의 범주 바깥에 있었다. 대표적으로

16) <외국 문학과 번역 출판>, 『동아일보』, 1961.4.16., 4면.

17) 박지영, 「‘음란(외설) 시비의 이면: 『차털리부인의 연인』(판례)의 번역과 젠더/섹슈얼리티/계급정치(1945-1979)」, 『여성문학연구』 제4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189-190쪽.

18) <독서 타진 ② 중고등학교학생>, 『조선일보』, 1960.1.21., 4면.

는 1965년 희망출판사와 풍년사를 비롯하여 다수의 출판사에서 이언 플레밍의 작품을 007전집 따위로 출간했다. 문선각에서도 크로프츠, 크리스티, 포우, 반 다인, 얼 스탠리 가드너의 추리 소설 등을 묶어 세계명작추리문학전집을 간행했다. 문선각은 '세기적인 살인 참극', '신출귀몰하는 범인'과 같은 문구를 써가며 책을 홍보했다. 이렇게 보면 연애 소설이나 추리 소설 등 대중적인 장르소설은 대개 문화적 정당성의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다. 책에 부과된 계몽과 교양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출판 절차상의 비윤리성 또한 '악서'를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이었다. 1960년대에 중간(重刊)이나 무단 복제 등 현재의 관점에서 다소 비윤리적으로 보이는 상업 행위를 처벌하거나 규제할 마땅한 방법은 없었기에, 이러한 관행은 만연했다. 1960년대 초중반에는 아예 그러한 규정이 성문화된 바 없었고, 1965년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주도로 출판 윤리의 제정이 이루어졌으나 강제력이 있는 규칙은 아니었다. 이를테면 <만가>는 1960년에만 노벨출판사, 과학사, 철리문화사, 배영문화사, 신태양사 등 다섯 곳에서 앞다투어 출판되었다. <세설>은 1960년과 1961년 진명문화사와 입문사에서, <인간 실격>은 1961년과 1962년 신태양사와 정음사에서 각각 출판되었다. 1960년대에만 이시자가 요지로의 <가정교사>는 3종, <원죄>라는 제목으로도 번역된 미우라 아야코의 <양치는 언덕>은 4종, 고미카와 준페이의 <인간의 조건>은 5종이 출간되었다. 현재 도서관 등에 남아 있는 자료만도 이 정도이므로 정식으로 도서관에 납본되지 않은 책까지 합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¹⁹⁾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의 경우

19) 이렇게 중간되는 일은 특히 일본 소설에서 자주 나타나긴 했으나, 007 시리즈 역시 1965년에만 총 7개 출판사에서 70여 종이 출간되었다(양병탁, 「우리 번역 출판 문화의 성장을 위하여」, 『출판문화』, 1974년 4월호, 대한출판문화협회, 1974, 2쪽).

1964년 12월 9일부터 1965년 11월 14일까지 <아사히신문>에서 현상 소설로 연재되었는데, 연재 도중 국내에 전반부의 내용만을 담아 상(上)권이 출간되고 1960년대에 무려 10종이 나왔다.²⁰⁾

원서의 출간과 함께(심지어 때때로 그 이전에) 국내에서 번역 출간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번역이 제대로 되었을 리는 만무했다. 출판사들은 다른 출판사보다 먼저 출간하기 위해 전문 지식인이나 교수보다 빠르게 작업할 수 있고 저렴하게 고용할 수 있는 대학생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번역은 가정교사와 함께 대학생들에게 상당히 인기 있는 아르바이트였다. “까다롭게 난해한 작가의 작품이 아니고 일반에 널리 알려진 무난한 저술은 구태여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일류 대학 교수진을 동원하지 않으려는 다시 말하자면 제작비를 적게 들이고 정가를 싸게 먹여 많이 팔자는 출판사 측의 잇속이 이 학생 「아르바이트」를 마련해 놓은 것이다.”²¹⁾ 하지만 대학생 번역가의 이름을 싣는 것은 책의 가치를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었으므로 출판사는 번역자의 이름이 명시하지 않은 번역서를 내거나 유명 번역가의 이름을 도명하기도 했다.

책을 빠르게 번역 출간하는 또 다른 방법 중 하나는 일본어 중역이었다. 세계문학전집의 등장으로 원전 번역이 ‘양서’의 규칙처럼 정립되었지만, 그런 규칙이 모두에게 적용되지는 못했다. 일본어나 영어 정도를 제외하면 다른 외국어를 전공한 사람은커녕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따라서 외국어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보다는 일본에서 번역 출간된 책을 중역하는 편이 남들보다 빠르게 책을 출간하는 데에 유리했다. 이런 중역본은 ‘날치기’ 또는 ‘줄속’ 번역판, ‘모자이크’ 식 편집, ‘조산(早産) 판’, ‘과속

20) <현해탄에 물결높다 한일협정정조인 뒤에 오는것 (8) 대중문화의 침투>, 『동아일보』, 1965.7.6., 1면.

21) <학생 「아르바이트」 탐방 ② 번역>, 『조선일보』, 1960.9.1., 4면.

도 번역물' 등으로 불렸다.²²⁾

문화적 정당성의 마지막이자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원천 텍스트의 출신, 더 정확히는 일본 번역물인가 아닌가 여부였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 번역물은 대중이 접하기 어려웠다. 이승만 정권이 '반일정책'을 고수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일본 출판물의 수입 및 판매는 상당히 제한적이었고, 일부 학술 도서와 공공 기관 보관용 교양 도서에 한해서만 반입이 가능했다. 사정은 1960년 4·19를 기점으로 달라졌다. 갑작스럽게 정책이 중단되자 일본 문화와 상품이 급격하게 수용되었다. 밀수로 음반, 문구류, 의복, 화장품 등이 수용되었고, 일서 반입과 번역도 더 이상 불법적 행위로 간주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60년대 초중반 일본 번역물은 크게 범람했고 여러 번 베스트셀러에 오르내리며 대중적인 인기를 자랑했다. 하라다 야스코의 〈만가〉, 이시자카 요지로의 〈가정교사〉,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 〈양치는 언덕〉이 대표적이다. 그 외에도 다니자키 준이치로의 〈세설〉,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 고미카와 준페이의 〈인간의 조건〉, 아마구치 히사요의 〈사랑과 죽음이 남긴 것〉도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비소설로는 오다 마코토의 세계 여행기인 〈나는 이렇게 보았다〉, 미시마 유키오의 에세이집 〈구멍 뚫린 인간 진리〉도 높은 판매 부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갑작스러운 일본 문화와 일본 번역물의 인기에 당대 출판인과 지식인 사회에서는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초대 회장을 지낸 김창집은 “일어나 일서 번역 출판물의 범람은 다른 일제 생활품보다 우리의 민족문화와 우리 사회의 장래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²³⁾ 이하윤이 앞서 ‘아프레’적

22) 〈해방 17년 (4) 출판〉, 『조선일보』, 1962.8.11., 3면; 〈만물상〉, 『조선일보』, 1962.11.16., 1면; 〈난장판 출판계〉, 『경향신문』, 1964.5.10., 5면.

인 ‘비트·제네레이숀’ 작품을 비난한 근본적인 이유도 그것이 ‘일서 번역물’이기 때문이지, 단순히 내용 때문만은 아니었다. 해당 기사의 첫머리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4·19 이후의 일서 번역물의 범람은 어디까지나 이 정권의 독선적인쇄 일 정책 붕괴의 반동에서 온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아 일찌기 이를 알기알부 할 것까지도 없었으나 제2공화국이 수립된 오늘날까지 여전히 일서 번역 이 출판계에서 성행되고 더우기 이에 지명 작가가 동원되어 식자의 빈축을 사는 현실이고 보면 부득이 논의치 않을 수 없다.”²⁴⁾

냉전 상황에서 러시아나 중국의 문학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밀접한 경우 애초에 수용되기가 어려웠으므로, 공산 진영 국가의 원천 텍스트라는 이유로 특정 문학이 문제시된 경우는 드물었다. 반면 일본 번역물은 금지와 수용 사이의 모호한 경계에 놓여 있었고, 내용의 건전성과 출판 윤리의 준수 여부보다 일본에서 들여온 책이라는 사실 자체는 더 결정적인 문화적 정당성 기준으로 작용했다.

일본에 대한 유독 민감한 반응은 일본어 중역과 영어 중역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이어진다. 앞서 보았듯 중역은 골칫거리로 회자될 만큼 한국 번역 출판 장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언급되었고, 번역 장에서도 점차 기피되었다. 그런데 이때 문제시된 경우의 중역은 일본어 중역만을 일컬었다. 고원은 “그 방면의 전문가가 별로 없는 특수한 외국어 저술을 가령 영역에서 중역한다든지 할 경우가 있음은 부득이하다고 하더라도” “일본인 저작을 제외하고는 일어에서 우리말로 중역하는 일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한

23) <과연 ‘봄’으로만 그칠 것인가>, 『경향신문』, 1960.11.9., 4면.

24) <일본 문학 번역과 작가>, 『경향신문』, 1960.10.12., 4면.

다.²⁵⁾

흥미로운 사실은 문화적 정당성을 박탈당한 '악서'를 향한 비난이 문화 상품의 이원성, 즉 문화 대 경제를 대립시키는 이분법을 근거로 삼는다는 점이다. 정권과 지식인, '양서' 출판사 등 교양의 지배 권력은 출판을 통한 경제적 이윤 추구를 부차적인 것, 심지어는 문화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문화인 아닌 상인들은 그런 풍조에 영합해서 마치 부채질이나 하듯이 「적선(赤線) 책」들을 마구 찍어낸다"는 비판이다.²⁶⁾ 출판 평론가이자 당대 대표적인 '양서' 출판사였던 을유문화사 주간이었던 안춘근은 이러한 '악서'란 '자격이 없는 자'들이 '문화사업으로서의 출판'을 '작란질'하여 그것에 '협잡'을 놓아 벌어진 '사회의 해독(害毒)'이라고 맹비난한다.²⁷⁾ '양서' 체제의 문화 권력에 이러한 상업주의적 출판은 교양의 확산과 문화적 근대화의 정립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겨졌다.

3. 지정학적 변화와 재편되는 문화적 정당성

1960년대 초중반 일본 대중소설 번역물은 문화적 정당성의 세 가지 기준, 텍스트 내용의 건전성, 출판 윤리의 준수 여부, 원천 문화의 적절성으로부터 모두 벗어나 있었다. 따라서 그것은 지식인을 중심으로 한 '양서' 진영에서 명백한 비난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기점으로 비난의 초점이 변화한다. 이 장에서는 일본 대중소설에 대한 평가와 그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지정학적 변화가 '악서'의 판단 기준에 야기

25) 〈번역 출판의 도의 문제〉, 『동아일보』, 1960.8.11., 4면.

26) 〈외설 서적 어떻게 막나〉, 『경향신문』, 1965.5.15., 6면.

27) 〈출판인의 양식과 그 요건〉, 『동아일보』, 1960.6.9., 4면.

한 효과를 이해하고자 한다.

3-1. 일본 대중소설 번역물과 식민지 트라우마

1960년대 초 일본 번역물에 대한 비판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일본의 문화적 수준에 대한 폄하다. 일본 문화는 세계적 수준에 못 미치므로 우리가 모방할 가치가 없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고, ‘천박하고 피상적이고 잔재주나 부리는 것’이 일본 문학이라는 강도 높은 조소가 언론에 실렸다.²⁸⁾ 언론에서는 <가정교사>의 작가 이시자가 요지로가 일본에서 ‘이류급에 속하는 사람’ 또는 ‘삼류 작가’라며 수용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고, ‘무슨 세계적인 걸작이나 되듯이’ 번역하는 세태를 비판하거나 대중적인 일본 번역물에 ‘불건전한 인소가 많’다고 못 박기도 했다.²⁹⁾ 심지어 국내 신춘문예 응모 작품에 “<아프레>적인 성 묘사를 능사로 한 작품만이 허다”한 이유가 일본 도서 수용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었다.³⁰⁾

지식인, 문인, 출판인은 일본 문학 수용에 대해 신중론을 취했으나, 일본 대중소설에 대해서는 명확한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장경학은 “일본 문학 번역 소개는 일반적으로 논한다면 외국 문학을 섭취하는 일이니까 나쁘다 할 수 없을 터”라면서, 다만 아직 한일이 국교를 정상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나 과거 식민 문제가 청산되지 않은 사실을 고려하면 선불리 일본 문화를 수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는 여기에 덧붙여 그 소설들이

28) <수치스런 해적판 범람>, 『조선일보』, 1965.9.23., 5면; <만물상>, 『조선일보』, 1962.5.20., 1면.

29) <여적>, 『경향신문』, 1961.3.17., 1면; <만물상>, 『조선일보』, 1961.7.23., 1면; <「베스트·셀러」의 조건>, 『조선일보』, 1962.10.16., 8면; <만물상>, 『동아일보』, 1964.1.8., 1면.

30) <청취자를 희롱하는 「프로」가 돼서는>, 『경향신문』, 1961.1.8., 4면.

‘일본 문학의 핵심적인 우수작’이 아니므로 번역된다고 한들 ‘우리의 문화를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한다.³¹⁾ 대한출판문화협회 초대 회장을 지낸 김창집도 “물론 어느 나라 책이든지 좋은 책은 읽어야 하며 또 번역 출판도 되어야 하겠”다고 하면서도, “일본에서 베스트셀러로 잘 팔리고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 과연 우리에도 읽히어야 할 명작이며 양서였던가”라며 국내에 수용되는 일본 도서의 수준을 의심했다. 일본 문학이 본격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한 1960년대 초중반의 번역 출판 담론상에서 일본 문학은 ‘저속’, ‘유치’, ‘알팍’하고, “대중의 저속한 취미에 영합하려는 「선정적인 것」”이자 ‘하등 문제작’이었다.³²⁾

이러한 일본 대중소설 번역물의 수용은 ‘문화적 침략’으로 받아들여지며 식민지 트라우마를 자극했다.³³⁾ 4·19가 대중에 각인시켰던 것은 식민지, 분단, 부정 선거와 독재를 지나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자주적인 근대 국민국가 건설이 가능할 것이라는 상상이었다. 그런데 불과 반년도 지나지 않아 일본 문화가 급속도로 수용되었고, 재식민화의 위협으로 여겨졌다. 혹자는 “일본의 번역물에게 영토를 빼앗긴 느낌”이라고 평했다.³⁴⁾ 서울대 사범대 교수였던 김성근은 “우리는 문화적 국수주의를 혐오한다”, “학문상 문호 개방은 지극히 당연한 일임에 틀림없다”고 지적하면서도,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일본의 ‘문화 식민지’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표명했다.³⁵⁾ ‘일서 출판의 쏠적 몰염치’라는 제목의 기사는 일본 도서의 번역 출

31) <언제나 면할가... 문화 식민지>, 『동아일보』, 1962.4.23., 4면.

32) <일본 문학 작품의 한국어 번역(下)>, 『경향신문』, 1960.9.3., 4면; <일본 문학 번역과 작가>, 『경향신문』, 1960.10.12., 4면; <황설수설>, 『동아일보』, 1963.2.1., 1면.

33) <말썽 일으킨 일본 색채>, 『동아일보』, 1960.8.3., 4면; <일상품 불매 운동을 보고>, 『경향신문』, 1965.7.6., 2면.

34) <다시 판치는 일어 번역서>, 『경향신문』, 1962.10.15., 3면.

35) <언제나 면할가... 문화 식민지>, 『동아일보』, 1962.4.23., 4면.

판 현황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하기야「출판의 자유」이므로 어느 나라, 누구의 것을 번역 출판·방송하든지 무관한 일이라고 일단 그 명분을 주장할 수 있으리라. 그렇다고 혹은 반대로 과거의 민족적 감정을 편벽스럽게 내세우느냐 하면 실상은 그것만도 아니다. [...] 그나 그뿐인가. 며칠 전 어느「출판사」사장이라는 사람의 말이 자기가 발행한 책의 저자인 일본 어느 작가를 초대하여 강연회를 여는 등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켜 보고 싶다는 농담 아닌 피력을 들었을 때, 적이 그 발언인의 민족적 염치와 현 시대에 처하여 사는 한 사람으로서의 사회 구성분자 됨의 염량을 의심 안 할 수 없었다.”³⁶⁾

일본 소설의 범람을 식민화로 간주하는 논리에서 흥미로운 점은 그 주장이 ‘서구’를 동반한다는 사실이다. 1960년 이하윤은 일본 문학이 ‘구미의 그늘’ 밑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문학 작품에 것처럼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한다.³⁷⁾ 같은 해 한 기사는 “본질적인 면에서 볼 때 일본의 문학은 이 역사가 서구 문학의 영향을 받아 형성 개화된 것”이며 따라서 “한국이 구미와 직결될 수 있는 오늘날에는 일본 문학이 전일처럼 어떤 강력한 영향을 한국 문학에 줄 수도 없으며 또한 그만한 가치도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논한다.³⁸⁾ 서구의 영향력과 서구 문학 번역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본 문학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다. 일본 문학은 여전히 ‘구미 문화의 모방’이자 ‘번역’ 단계에 머물러 있는 데다가 ‘천박’하다고까지 논의된다.³⁹⁾ 한국이 서구의 책이나 고전을 번역하는 것은 민족

36) 〈일서 출판의 쏘적 몰염치〉, 『동아일보』, 1962.10.29., 6면.

37) 〈일본 문학 작품의 한국어 번역(上)〉, 『경향신문』, 1960.9.2., 4면.

38) 〈일본 문학 번역과 작가〉, 『경향신문』, 1960.10.12., 4면.

39) 〈한일 문화 교류의 자세〉, 『조선일보』, 1965.12.22., 2면.

문화의 창안을 위한 것이지만, 일본이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한국이 일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모방으로 간주되었다.

일본 대중소설 수용의 문화적 정당성을 향한 '이중 잣대'는 국제 저작권 가입을 둘러싼 논쟁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났다. 당시 정부와 출판계, 그리고 지식인층에서는 국제저작권 가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당장의 가입은 출판산업의 활로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이유로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우세했다. 그런데 해당 논의가 일본 번역물에 대해서는 유독 그것이 국내 출판계와 독서계에 미치는 악영향과 그것이 불리일으키는 수치감을 기술하는 데에 치중되어 있다. 즉 일본을 제외한 다른 서구 출판물에 대한 해적 행위는 국제저작권 가입을 둘러싼 대외적이고 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하지만, 일본 번역물 문제는 출판인의 각성과 독서 대중의 계몽 등 대내적인 방식으로 해소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일본 번역물에 대한 해적 행위의 해결책이 대내적인 출판 윤리 문제로 귀결된 것은 문화적 식민화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과거 침략국의 문화를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행위는 국내 번역 출판 장의 도덕적 해이이자 민족적 자주성과 민족 주체성의 훼손으로 간주되었다. 조연현은 “일본의 소설들이 우리나라에 함부로 번역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 위기를 반영해 주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⁴⁰⁾ 이 하운은 “강용당하였던 언어와 그 문화에 시간의 거리와 냉혹한 비판이 없이 이것을 안이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 후진성을 미리 자인하고 나서 는 경거라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⁴¹⁾ 김창집은 일본 번역물의 출판이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문화 발전’을 저해한다고 출판계를 훈계했다.⁴²⁾ “현재의 추세를 이대로 방임한다면 여기가 영원히 이웃 섬나라의 문

40) 〈일본 문학의 위기〉, 『동아일보』, 1963.11.13., 5면.

41) 〈일본 문학 작품의 한국어 번역(上)〉, 『경향신문』, 1960.9.2., 4면.

화 식민지의 신세를 면할 날이 없을 것도 뻔한 일”이라는 우려까지 나타났다.⁴³⁾ 국내 일본 문화의 수용과 소비가 ‘매판’이라는 것이다.⁴⁴⁾ 이처럼 일본 문화의 수용은 외국 문화를 대하는 일반적인 태도의 문제보다는, 탈식민 국가의 주체성 확립이라는 정치적 문제로 환원되어 이해되었다.

3-2. 한일 국교 정상화와 정당성 기준의 변화

한편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공동 협력으로써 공산주의의 위협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박정희 정권 초기부터 한일 협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었다. 1963년 대선에서 윤보선을 간신히 앞선 박정희는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야 했다. 이에 따라 한일 협정 준비가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되었다. 1964년 6월 3일 저항 세력은 한일 협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치르고 한일 협정 반대 투쟁을 열었다. 이들은 정권의 민족적 민주주의에 대항하여 저항적 민족주의를 내세웠다.

이러한 정치적 긴장감 속에서 일본 번역물에 대한 비판도 1965년 6월 22일 한일 기본 조약 체결 이전까지 점차 고조되어 갔다. 소설가 박종화는 ‘전통은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일본 문화가 대량으로 살포되고 있다면서 현재 일본 문학은 “「섹스」와 폭력 중심”이라고 비판한다. 국내에 수용되는 일본 소설은 “통속 작가로 알려진 소설가의 「반숙 작품」”이라는 지적도 꾸준히 이어졌다.⁴⁵⁾

42) <과연 「봄」으로만 그칠 것인가>, 『경향신문』, 1960.11.19., 4면.

43) <언제쯤 면할가... 문화 식민지>, 『동아일보』, 1962.4.23., 4면.

44) <한일 문화 교류의 자세>, 『조선일보』, 1965.12.22., 2면.

45) <일본은 들어오고 있다(완) 문화>, 『경향신문』, 1965.2.22., 5면; <이 세태... ⑧ 덮어 놓고 맞장구>, 『조선일보』, 1965.3.11., 1면.

상황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달라지기 시작한다. 박정희 정권은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며 강압적으로 시위대를 진압했고, 1965년 6월 22일 반공과 경제 발전, 근대화를 구실 삼아 한일 기본 조약을 체결했다. 그 이후 출판 장의 중심부에서 일본은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문화 교류를 이루어야 하는 이웃나라, 아시아 지역을 함께 이끌어갈 동반자, 우리가 참고해야 할 선진국으로 묘사된다. 정치적 관계와 역사적 감정은 문화 수용과 무관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를테면 한일 기본 조약 체결 직후 출간된 일광출판사의 전후일본단편문학전집에서 편집부는 “우리와 비슷한 생활양식, 감정을 가진 일본 문학”을 수용할 때 아무런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본 문학 수용에 담긴 정치성을 소거한다.⁴⁶⁾ 백철은 1966년 〈출판문화〉에 「출판계에 보내는 신춘 백서」를 실으며 일본과의 문화 교류에 민족적 수치감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어서 그는 일본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유 진영의 국가이자 동양의 문화적 전통을 보유한 국가일 뿐만 아니라 ‘현대 문화의 수준이 높은 나라’라는 점을 들어 일본 번역물 수용의 문화적 정당성을 강조한다.⁴⁷⁾ 이처럼 한일 국교 정상화라는 지정학적 사건은 원천 문화에 대한 문화적 정당성의 기준을 재편하고 있었다.

물론 한일 기본 조약 체결과 동시에 모든 분위기가 단번에 바뀌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를테면 1968년 언론에서는 “일본의 2, 3류 작가의 2, 3류 소설의 번역 출판은 여전하다”면서 “기왕 하려거든 좀 더 좋은 소설을 출판했으면 어떨냐”고 질책한다. 문학 평론가 홍기삼도 1970년 “받아들일

46) 편자, 「간행에 즈음하여」, 阿川弘之 외 저, 김용제 역, 『전후일본단편문학전집 1』, 일광출판사, 1965, 1쪽.

47) 백철, 「출판계에 보내는 신춘백서: 번역 출판」, 『출판문화』, 1966년 1월호, 대한출판문화협회, 1966, 6쪽.

것은 받아들여되” “소비성 위주의 사이버 지식 산업 따위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고 지적한다.⁴⁸⁾ 이후 1970년대 초반 <대망>, <풍운아> 등 일본 역사 소설에 대해서도 ‘저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변화는, 한일 기본 조약 체결 이후 일본 번역물이 원천 문화가 일본이라는 이유만으로 ‘악서’로 낙인찍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 대중소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그것의 수용은 더 이상 식민화에 대한 공포를 직접적으로 유발하지 않았다. 일본 문화 자체에 대한 비난이 사라진 담론적 공간의 빈틈에서는 국내 번역 출판이 근대화론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득세하기 시작했다. 이는 김창집의 태도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1960년 그는 일본의 베스트셀러 도서가 국내 문화에 유익하지 않으며 일본 문화의 유입이 민족적 자주성을 저해한다는 발언을 남겼지만,⁴⁹⁾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다음과 같이 입장을 선회한다.

“전후 얼마 동안은 「예로」와 「섹스」적인 출판물이 일본 출판계를 휩쓸다시피 하였으나 최근에는 이런 책에 싫증을 느끼는 독자들이 시대물과 「논픽션」 서적으로 기울어 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의 풍토적인 섬세한 감정과 일본인의 생리적인 낭만성을 바탕으로 한 출판물들이 많은 독자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이다. 일본은 문화 수준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세계 강대국의 하나지만 출판 점수에 있어서도 동양에서는 압도적인 위치에 있다.”⁵⁰⁾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일본 번역물의 무단 출판은 이전처럼 자발적인 식민화의 징후가 아니라 출판 윤리의 위배로 재규정되었다. <아사히신문>

48) <만물상>, 『조선일보』, 1968.1.17., 1면; <독서층 파고드는 일본 역사 소설>, 『조선일보』, 1970.11.25., 5면.

49) <과연 『봄』으로만 그칠 것인가>, 『경향신문』, 1960.11.9., 4면.

50) <한일 문화 교류, 받아들일 것과 막을 것 (6) 출판 부문>, 『동아일보』, 1966.2.8., 6면.

에서 연재되던 〈빙점〉이 완결되기도 전에 국내에서 '상(上)권'으로 출간되었을 때, 이 사건은 '저질의 일본 문화 유입'이 아니라 국내 출판 윤리의 미준수, 전근대적인 출판 방식, 국가적 위신의 훼손이라는 점에서 쟁점화되었다. 백철은 일본이 한때 식민 지배국이었지만 한일 기본 조약을 체결한 만큼 더 이상 "그 일반의 예와 아주 벗어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⁵¹⁾ 아동문학가 마해송은 한일 문화 교류 관련 특집 기사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들 [일본]의 저작을 무단 번역 출판하는 일은, 곧 우리는 후진국이요 열등국이요 독자가 적어서 수지가 맞지 않으니 "좀 봐주시오. 무료로 봐주시오" 하는 치사하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으니 국가의 위신이나 국민의 체면이 이럴 수가 없는 것이다."⁵²⁾

한일 국교 정상화라는 지정학적 사건은 일본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과 문화 수용에 따른 민족적 수치감을, 대등한 문화 관계의 수립, 국경을 넘어선 문화 교류, 문화적 근대화라는 목표 지향적 실천으로 변화시키는 한 가지 계기였다. 1965년 이전까지 원천 문화의 '일본성'이 가장 결정적인 '악서'의 기준이었다면,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는 '비윤리적 제작·유통(저작권)' 문제가 핵심적인 기준으로 부상한 것이다. 한일 국교 정상화는 일본 문화의 수준을 평가절하하던 지식인 담론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반일'이라는 민족주의적 비판의 강도를 약화시켰다. 이는 역설적으로 '악서'의 생산을 더 용이하게 만들었다. 그럴수록 정부와 지식인 등을 비롯한 '양서' 진영에서는 저작권 침해 및 해적판을 비판하는 등 '출판 윤리'를 더욱 강조했다. 번역 출판장에서 일본에 대한 적대적 감정, 역사적 관계에 대한 성찰, 그에 따른 일본 문화 수용의 적절한 자세를 논의하던 자리에 남은 것

51) 백철, 「출판계에 보내는 신춘백서: 번역 출판」, 『출판문화』, 1966년 1월호, 대한출판문화협회, 1966, 6쪽.

52) 〈한일 문화 교류, 받아들이 것과 막을 것 (1) 문학 부문〉, 『동아일보』, 1966.1.22., 5면.

은 문화적 근대화에 대한 의지였다.

4. ‘양서’ 체제의 균열과 대중문화로서의 ‘악서’

한일 국교 정상화는 정부, 대형 출판사, 지식인의 연합으로 구성된 ‘양서’ 체제에 균열을 노출했으며, ‘양서’ 진영은 그 균열을 출판의 문화적 근대화로 봉합하고자 했다. 이는 ‘출판윤리의 준수 여부’를 제외하면 더 이상 대중이 즐겨보던 ‘저질’의 ‘일본’ 대중소설을 출판 장에서 배제할 논리적 근거가 없음을 가리켰다. 대중문화가 본격적으로 분출될 하나의 조건이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한일 국교 정상화를 기점으로 일본 문화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일제히 사라진 것이 아니듯, 대중문화에 대한 욕구도 1965년을 기점으로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다. 조약의 체결은 오히려 ‘양서’ 체제 내부에 잠재해 있던 균열, 즉 국가의 교양주의적 통제와 시장의 상업주의적 욕망 사이의 긴장이 수면 위로 드러난 계기로 보아야 한다. 대중문화를 비판하는 일본성이라는 가장 주요한 요소가 약화되자, 그 틈을 비집고 시장과 대중의 논리가 전면적으로 부상할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이 균열 앞에서 문화 권력과 시장 행위자가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대응했는지, 또 길항하며 공존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4-1. ‘유리의 메커니즘’

일본 번역물에 대한 박정희 정권의 태도는 모호했다. 박정희 정권은 일본의 자본과 상품에 대해서는 문호를 개방했지만, 문화 측면에서는 부산

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일본 문화의 밀수를 제한하는 등 간접적인 통제를 실시했다. 엄격한 통제나 억압의 의사는 내비치지 않았다.⁵³⁾ 박정희 정권은 일본 문화 수용에 대해 국민 각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주체성과 자주성을 함양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문화적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민간과 대중에 위임했다.⁵⁴⁾

김성민에 따르면 일본에 대한 박정희 정권의 금지 양상은 1950년대처럼 '원천적인 배제'가 아닌 '부인(denial)의 메커니즘'으로 나타났다.⁵⁵⁾ 이는 금지를 존속하면서도 왜곡, 즉 은폐·번역·모방·수정 등의 검열로써 문화를 유입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대표적으로는 1970년대 텔레비전에서 방영된 일본 애니메이션이 그랬는데, 이때 부인의 메커니즘은 주로 애니메이션의 국적을 숨기거나 변경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마징가 Z>의 주인공 '가부토 고지'는 '쇠돌이'로, 또 <마징가 Z>, <황금박쥐>, <우주소녀 아톰> 등의 주제를 멜로디를 유지한 채 가사만 한국어로 번역하는 방식이었다.

반면 일본 번역서에 대해서는 부인의 메커니즘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나타났다. 텔레비전과 달리 출판물의 경우 교양의 보급이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 번역 출판물의 유입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지만, 교양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근거하여 특정 기준에 미달하는 일본 번역물의 유행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 특정 기준이란 “문학사적 가치가 있는 작품”, “감미롭고 알팍”하지 않은 작품, “일본 문학의 핵심적인 우수작”, “명작”과 “양서” 등을 가리켰다.⁵⁶⁾ 일본 문학은 그 전체적인

53) 김성민, 『일본을 금하다: 금제와 욕망의 한국 대중문화사 1945-2004』, 김성민 역, 글항아리, 2017, 35-38쪽.

54) <박 대통령 취임사>, 『경향신문』, 1963.12.17., 1면; <비준 뒤에 오는 것 (2) 주체성 확립>, 『동아일보』, 1965.8.17., 1면.

55) 김성민, 앞의 책, 104-105쪽, 116-119쪽.

상의 일부를 부인하고 은폐함으로써 수용 가능했다.

부인의 메커니즘 아래에서 각 작품은 교양과 저속, 모랄과 퇴폐라는 이분법적 도식을 통해서만 의미를 얻을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높은 문학적 평가를 받았던 다니자키 준이치로의 <세설>, 이시하라 신타로의 <태양의 계절>과 이러한 소설을 담은 신구문화사의 개천상수상소설집과 일본전후 문제작품집 등은 크게 문제시된 바 없다. 반면 저속성이나 퇴폐성과 거리는 멀었지만 상대적으로 대중적인 소설이라고 받아들여졌던 하라다 야스코의 <만가>나 이시자카 요지로의 <가정교사>는 물지각한 수용의 예시로 비난받았다.

주의해야 할 사실은 이러한 부인의 메커니즘이 번역 출판 장의 중심부, 엘리트 집단, 정부 등 ‘양서’ 생산자 진영에 한정되어 작동했다는 점이다. 몇몇 출판사들은 애초에 일본 번역물임을 숨길 생각조차 없다는 듯 오히려 일본 문학임을 전집 및 선집의 제목과 광고에 내걸었다. 광고에서는 “일본의 초 베스트셀러”, “일본 전후 최대의 화제작!”, “23년간 베스트셀러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 문학 불후의 명작”이라는 말도 쓰였다.⁵⁷⁾ 일각에서 번역된 텍스트의 원천 문화가 일본이라는 점이 은폐·번역·모방·수정되기는 커녕 책을 홍보하는 데에 쓰였다는 사실은, 당시 일본 문화에 대한 부인의 메커니즘과는 다른 메커니즘이 함께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유리(isolation)의 메커니즘’이라고 칭할 수 있다.

56) <타당성 있는 기준하에서>, 『경향신문』, 1960.8.22., 4면; <일본 문학 작품의 한국어 번역(上)>, 『경향신문』, 4면; <과연 『봄』으로만 그칠 것인가>, 『경향신문』, 1960.11.19., 4면; <한일 문화 교류, 받아들일 것과 막을 것 (6) 출판 부문>, 『동아일보』, 1966.2.8., 6면.

57) <계명문화사 장편 소설 그대 이름은 전4부작>, 『동아일보』, 1960.10.15., 1면; <정향사 인간의 조건>, 『동아일보』, 1960.10.17., 1면; <신타양사 장편소설 젊은 사람>, 『동아일보』, 1961.1.22., 1면.

유리의 메커니즘이란 특정 대상을 그와 연관된 관념이나 감정에서 분리하여 수용하는 방어 기제다. 일본에 대한 반감과 일본 문화의 수용이라는 기로 앞에서 부인의 메커니즘이 교양과 저속의 대립을 상징하고 수용 가능한 일본 문화를 선별하는 식으로 작동했다면, 유리의 메커니즘은 일본 문화 자체를 민족 감정과 역사적 맥락 등 외부 요인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했다. 부인의 메커니즘의 주요 논리였던 식민지 경험, 민족 감정, 문화적 주체성, 국제 저작권의 문제는 유리의 메커니즘에서 사상되었다.

그 대신 유리의 메커니즘은 상업주의를 통해 기능을 확보했다. 이것이었다 가능했던 것은 일부 출판사와 독서 대중의 욕구가 일본 번역 출판물에서 만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출판사 입장에서 일본 대중 번역물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생산물이었다. 저렴하게 고용할 수 있는 대학생 번역가를 통해 단기간에 생산할 수 있었고, 판권 계약이나 출판 윤리도 무시한 채 생산되었다. 사실 장 주변부에서 출판 윤리는 이상론에 불과했다. “요즘은 출판 윤리 확립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윤리위 같은 것을 만들어 공동 출혈을 피하고 국제적 체면도 갖추자는 것이 그 의도다. [...] 그러나 이런 의견은 아직도 이상론이다. 군소 출판업자는 냉담하기 때문이다.”⁵⁸⁾ 허울 좋은 ‘윤리’가 생존의 문제까지 넘어설 수는 없었다.

수용자 차원에서 보면 1960년대 초중반 일본 문화는 세대를 가리지 않고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다. 강우원용에 따르면 이는 일본이라는 대상이 한글세대에는 ‘호기심’을, 그 이전 세대에게는 일제 강점기 때 느꼈던 ‘향수’를 자극했기 때문이다.⁵⁹⁾ 1950년대 이어진 이승만 정권의 ‘반일정책’

58) <이 고질... 언제까지나 (3) 출판계>, 『경향신문』, 1964.8.15., 5면.

59) 강우원용, 「1960년대 일본문학 번역물과 한국: 호기심과 향수를 둘러싼 독자의 풍속」, 『일본학보』 제93집, 한국일본학회, 2012, 79-93쪽; <출판 무모한 향일성... 저질 서적

에 대한 반작용도 일본 대중 번역물의 성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요컨대 김성민이 말하듯 “매스미디어의 상업주의와 대중의 욕망이 국가의 권위주의적 규제의 영향력을 웃돌고 있었다.”⁶⁰⁾

4-2. 민족의 교양과 개인의 쾌락

대중문화에 대한 박정희 정권의 태도는 매우 모순적이었다. 엄숙주의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박정희 정권은 〈선데이 서울〉과 같이 남성 노동자의 쾌락을 충족시키는 대중물을 허용했고, 텔레비전은 ‘군부 정권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불렸지만 대중가요와 ‘히피’의 출연을 엄격하게 통제했으며, 영화 시나리오 검열을 강화하고 이른바 ‘유신 영화법’까지 시행하면서 국책 영화는 대중 영화를 적극적으로 모방했다. 다만 교양이 문화정치의 근간이자 대중 통치의 방편이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박정희 정권은 조국 근대화와 민족중흥이라는 가치에 부합하는 문화에 선별적인 지원을 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는 문화는 ‘저속’과 ‘퇴폐’로 수식하며 금압하고 정화 작업에 돌입했다. 정권의 문화정치에서뿐만 아니라 번역 출판 장의 중심부와 지식인에 의해서도 대중적인 번역물을 비롯한 ‘악서’는 문화적 정당성을 박탈당했다. 민족문화는 지고한 가치를 지닌 것인 반면, 대중문화는 ‘난잡’하고 ‘저속’하며 ‘소비적’이고 상업적이며 ‘무책임’한 것으로 여겨졌다.⁶¹⁾

흥미로운 점은 선정적이고 대중적인 번역서는 일부 출판사와 지식인에게 ‘악서’라는 낙인이 찍히면서까지 비판받는 경우가 잦았지만, 그에 대한

범람), 『동아일보』, 1967.8.15., 5면.

60) 김성민, 앞의 책, 121쪽.

61) 〈8·15대담 『성년 한국』 문화 갈림길〉, 『동아일보』, 1966.8.15., 5면.

판금 조치나 내용 삭제와 같은 제도적인 조치는 극히 드물었다는 사실이다. 번역서가 아닌, 국내에서 저술된 음란 서적이 처벌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지 않았다. 1965년 경찰 당국은 음란 서적을 저술한 저자와 이를 제작한 출판사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음란 서적 3,500여 권을 압수하기도 했다. 1969년에도 외설 논란을 일으킨 잡지 <아리랑>과 <인기> 관련 인사가 구속되었다.⁶²⁾ 반면 번역서에 대해서는 음란 관련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1970년 출범한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가 <결정>을 통해 수십 종의 번역서를 음란 서적으로 간주하고 주문을 내렸지만, 경고나 당국에의 제재 건의 수준이었다. 음란 서적에 대해 판금 조치까지 시행된 것은 한참이 지난 1976년 무라카미 류의 <끝없이 투명한 블루> 정도가 눈에 띄는 뿐이다. <차털리 부인의 연인>뿐만 아니라 서구에서 오랜 기간 포르노그래피로 간주된 존 클리랜드의 <패니 힐>, 사드와 자허마조흐의 작품은 국내에서 버젓이 번역되고 판매되었다. 1970년대 초반 이후 유신 체제에서도 번역서가 판금 조치된 것도 대개 그 체제 저항적 성격 때문이었지, 그 선정적인 내용 때문은 아니었다. 박지영은 당대 대중적인 번역서를 향한 정권의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조치는 “서구 고전 텍스트를 읽히려는 당국의 독서 정책”과 체제 저항적인 서적의 검열에만 초점을 맞춘 “냉전 체제 하 경직된 정치 검열 상황” 때문에 발생했다고 지적한다.⁶³⁾

1960년대 문화적 근대화는 세계의 교양을 향한 강박 내부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틈새 공간을 마련하고 있었다. 문화적 근대화와 ‘양서’라는 문

62) <출판업자 등 7명에 구속 영장 신청>, 『경향신문』, 1965.5.14., 3면; <월간 「인기」 주간 등 3명 구속>, 『조선일보』, 1969.7.13., 7면.

63) 박지영, 「음란(외설) 시비의 이면: 『차털리부인의 연인』(판례)의 번역과 젠더/섹슈얼리티/계급정치(1945-1979)」, 『여성문학연구』 제4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217쪽.

화적 기획에서 대중은 계몽의 대상이었다. 정확히는 독서 대중이 세계의 교양으로서 ‘양서’에서 쾌락을 향유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그렇지 못한 독서는 민족문화를 저해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대형 출판사, 정부, 문인과 지식인이 제작한 책의 설계도는 결코 책에 대한 대중의 욕망을 만족시켜 주지 못했다.

물론 당대 ‘악서’의 생산자들도 ‘악서’라는 칭호를 바랐던 것은 결코 아니다. ‘양서’의 영향력이 상당했던 만큼 ‘악서’의 생산자들도 책을 ‘양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대표적인 장르소설이었던 007전집의 출판사들은 책머리나 광고 등을 통해 “전후 최고의 작가”라며 이언 플레밍의 문학적 능력을 부각하거나, ‘고급 독자’인 케네디의 사랑을 받았다고 홍보했다. 혹은 일본 대중소설 <빙점>의 경우 표지에 “아사히신문 천만 엔 현상 당선 소설”이라는 문구를 잘 보이게 표기해 소설의 우수성을 역설했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경우 광고를 통해 ‘부록’, ‘원색 컬러화’, ‘제 가계보 및 참고 지도’, ‘우수한 케이스’, ‘화려 견고한 장정’ 등 주로 ‘양서’에서 체재의 우수성을 강조했다.⁶⁴⁾

다만 이 시기 순수하게 ‘재미’를 위한 대중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등장하고 있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가정교사>가 대표적이다. 번역가 이시철은 「역자 후기」에서 “소설이란 재미있어야 한다”며 “이시자카 요오지로오의 <가정교사>는 재미와 예술성 및 철학성을 다분히 갖추고 있는 소설”이라고 설명한다.⁶⁵⁾ 문화적 기획으로서의 ‘양서’는 순수와 통속, 교양과 대중성의 경계를 규정하고 민족문화와 근대화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간주된 타자를 제도적·담론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성립

64) <삼국지를 압도하는 파천황의 전쟁 대하소설>, 『동아일보』, 1970.5.13., 1면; <만인의 지와 역을 키워주는 실록 대하소설!>, 『조선일보』, 1970.11.20., 5면.

65) 이시철, 「역자 후기」, 石坂洋次郎 저, 이시철 역, 『가정교사』, 문광사, 1962, 2문단.

했다. 거기서 재미와 감동은 무가치하거나 적어도 부수적인 것이었다. 반면 대중문화는 상업주의적인 출판 장 주변부 행위자의 이해 관심과 재미를 추구한 대중의 욕망이 뒤엉킨 결과였다. 대중 번역물의 생산과 독서는 '민족'이라는 언어를 동원한 국가와 엘리트 집단의 담론적·제도적 실천으로도 막을 수 없었다. '악서'의 생산과 소비에 민족문화를 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테다. 대중은 개인의 영역에서 민족적 상상보다 사적이고 즉각적인 쾌락을 추구했을 뿐이다. 설령 그것이 지배 집단에 의해 문화적 정당성을 박탈당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국가를 중심으로 제시된 '교양'의 경로를 이탈하여 개인의 '쾌락'을 위해 '악서'로 향했던 대중의 욕망이야말로 1960년대 문화적 동원의 실패를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징후라고 볼 수 있다.

5. 교양의 바깥, '악서'의 문화정치

1960년대 초중반 정권, 엘리트 그리고 번역 출판 장의 중심부 등 문화적 지배 집단은 해외 출판물의 번역과 수용이 민족문화를 발전시킬 것이라는 막연한 사회적 기대 속에서 일련의 실천을 기획했다. 그로부터 벗어나는 번역서는 '악서'라는 꼬리표와 함께 문화적 정당성을 박탈당했다. 그 기준은 통속적인 내용, 비윤리적 제작 방식, 그리고 원천 문화의 '일본성'이었다. 이 모든 요건을 갖춘 일본 대중소설은 당대 번역 출판 담론에서 가장 경계되는 대상으로 여겨졌으며 일본 문화의 질적 수준을 폄하하는 근거로 작동했다. 그러나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라는 지정학적 사건은 '일본성'이라는 기준의 효력을 약화시켰고, 문화적 정당성의 잣대는 민족 감

정에서 출판 윤리라는 ‘근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으로 이동했다.

1960년대를 전후로 ‘양서’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던 교양의 문화정치 아래에서 ‘악서’는 늘 꿈틀대고 있었다. ‘양서’ 체제는 번역 출판 장 전체와 일반 대중에도 분명 효력을 지니고 있었으나, 출판인의 상업적 욕구와 대중의 문화적 욕구를 제압하지는 못했다. 1960년대 초중반 번역 출판 담론에서 일본 대중소설이 문화적 식민성의 상징으로 거론될 때에조차 그것은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로 단지 일본 대중소설이라는 사실이 문화적 정당성을 박탈하는 기준이 될 수 없게 되면서, 대중이 좇던 쾌락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문화적 정당성을 박탈당한 ‘악서’는 대중의 호기심과 상업적 이윤 추구라는 동력 속에서 통제 바깥에서 독자적인 유통망을 형성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확장하는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었다. ‘악서’의 문화정치는 단지 ‘양서’를 중심으로 한 지배권력의 일방적인 통제가 아니라, 대중의 욕망과 시장의 논리가 교차하며 규범과 일탈이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역동적인 과정에서 나타났다.

이 글은 발전 서사 또는 지식인 중심의 서사로 그려지던 1960년대 번역 출판 문화에서, 문화적 정당성을 박탈당한 채 현재까지도 좀처럼 연구 대상이 되지 못한 ‘악서’에 주목했다. ‘악서’라는 이름 붙이기가 어떻게 작동했으며, 그것이 당대의 ‘양서’ 체제에 어떤 문화정치적 의미와 효과를 불러일으켰는지 추적하는 것이 이 글의 목표였다. 이때 1960년대 출판문화에 관한 자료가 한정된 상황에서 지식인과 정부의 담론을 중심으로 살피되, 담론의 균열과 그 이면에서 작동하던 ‘악서’의 유통 과정을 드러내고자 했다. 교양의 문화정치와 ‘양서’ 체제의 제도화, 출판 윤리에 대한 문제 제기, 일본 대중소설을 비롯한 ‘악서’의 부상, 한일 국교 정상화 등으로 번역 출판 문화가 역동적으로 재구성되던 이 전환의 국면에서, 우리는 국가의 통제적 기획과 더불어 대중의 문화적 욕구와 상업주의의 논리가 뒤섞인

1960년대 문화적 근대성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1960년대 초중반 일본 번역물의 출판사와 그렇게 만들어진 번역서를 구해 읽은 대중들은, '양서'라는 문화적 기획과 부인의 메커니즘 기저에 있던 민족적 상상에 저항하며 그것과 완전히 다른 사회적 상상을 제시했다고 보아야 할까?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1960년대 초중반 정부와 지식인을 중심으로 한 '양서' 진영에서 고수하던 부인의 메커니즘은 일본 문화의 일부를 은폐하면서도 전면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음으로써 수용의 구실을 마련했고, '악서'는 그 틈을 파고들었다. 출판 윤리에 대한 요구가 점차 강화되던 시기 자신의 재미를 좇아 덤핑시장에서 무단 복제된 책들을 구해 읽었던 대중과, 서구 고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박정희 정권의 '자유교양대회'에 동원된 대중은 분리된 존재가 아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대중문화에 대한 이른바 비참주의적 해석만큼이나 민중주의적 해석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대중문화를 문화적 정당성을 박탈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비참하다고 해석할 수 없는 것처럼, 대중문화가 대중의 정치적인 저항성을 보여준다고 단정 짓기도 어렵다.⁶⁶⁾ 1960년대 대중은 민족의 교양 대 개인의 쾌락이라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놓여 있지 않았다. 당대 번역 출판 문화에서 모습을 드러낸 대중문화의 생산과 소비는 결코 지배 집단의 권력에 대한 조롱, 저항, 전복의 의도를 담고 있지 않았다. 그들의 실천은 국가에 동원되고 민족 감정에 동조하면서도 개인의 쾌락에 따라 문화를 소비하는 '유리'의 전략에 가까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서'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대중문화가 적어도 민족을 위한 문화에서 벗어나는, 그 누구도 의도치 않은 방식으로 문화적 다원성에 대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는 점은 지적할 만하

66) 이상길, 『상징권력과 문화: 부르디외의 이론과 비평』, 컬처북, 2020, 41-47쪽 참고.

다. ‘악서’는 독서 시장에서 개인의 쾌락을 위한 소비의 존재를 일깨우며, 지식인 중심의 ‘고급’과 ‘저급’의 위계에 함몰되지 않는 새로운 문화적 선택지를 제공했다. 이는 당대 교양의 중심지로 각인되어 있던 책에서 상업적인 대중문화의 기능이 효력을 발휘하던 역설적인 순간, 그것을 생산하고 수용하던 개개인의 욕망에서 우연히 발견된 가능성이었다. 이러한 실천은 대중문화를 서서히 ‘악서’라는 꼬리표에서 분리시키고 있었다. 의도와 통제 바깥의 커뮤니케이션이야말로 1960년대 번역 출판의 문화정치와 문화적 근대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현장일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출판문화』

2. 논문과 단행본

- 강우원용, 「1960년대 일본문학 번역물과 한국: 호기심과 향수를 둘러싼 독자의 풍속」, 『일본학보』 제93집, 한국일본학회, 2012, 79-93쪽.
- 권보드래, 「『사상계』와 세계문화자유회의의 1950-1960년대 냉전 이데올로기의 세계적 연쇄와 한국」, 『아세아연구』 제54권 2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2011, 246-290쪽.
- 김병철, 『한국 현대 번역문학사 연구(上)』, 을유문화사, 1998.
- 김성민, 『일본을 금하다: 금제와 욕망의 한국 대중문화사 1945-2004』, 김성민 역, 글항아리, 2017.
- 김종희, 「1960년대 출판문화와 여성지 연구: 부르디외(Bourdieu)의 장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 박숙자, 「여성은 번역할 수 있는가: 1960년대 전혜린의 죽음을 둘러싼 대중적 애도를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 제38집,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5-42쪽.
- 박연희, 「1950-60년대 냉전문화의 번역과 “김수영”」, 『비교한국학』 제20권 3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2, 101-139쪽.
- 박연희, 「김현과 바슐라르: 1970년대 김현의 번역과 현대시 비평」, 『구보학보』 제20집, 구보학회, 2018, 451-479쪽.
- 박지영, 「김수영 문학과 번역」, 『민족문화사연구』 제39권, 민족문화사연구소, 2009, 200-228쪽.
- 박지영, 「음란(외설) 시비의 이면: 『채털리부인의 연인』(판례)의 번역과 젠더/섹슈얼리티/계급정치(1945-1979)」, 『여성문학연구』 제4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185-223쪽.

- 박지영, 『번역의 시대, 번역의 문화정치: 1945-1969, 냉전 지(知)의 형성과 저항담론의 재구축』, 소명출판, 2018.
- 윤영도, 「김수영과 문화냉전: 《황하는 흐른다》의 번역을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역총간』 제39집, 중국어문논역학회, 2016, 143-163쪽.
- 이두영, 『현대한국출판사』, 문예출판사, 2015.
- 이상길, 「애타게 라디오극연구회를 찾아서: 미디어 사회문화사의 방법론적 난점들」, 『언론과사회』 제22권 3호, 한국언론정보학회, 2014, 66-111쪽.
- _____, 『상징권력과 문화: 부르디외의 이론과 비평』, 컬처북, 2020.
- 이종호, 「1960년대 일본번역문학의 수용과 전집의 발간: 신구문화사 『일본전후문제 작품집』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21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15, 7-37쪽.
- _____, 「1960년대 〈세계문학전집〉의 발간과 전위적 독서주체의 기획」, 『한국학연구』 제41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77-102쪽.
- _____, 「1960년대 한국단편소설의 영어번역 양상 연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Korea Journal을 중심으로」, 『구보학보』 제28집, 구보학회, 2021, 677-708쪽.
- 이한정, 「일본 대중소설 『대망』의 수용 양상과 특징」, 『대중서사연구』 제21권 제2호, 대중서사학회, 2015, 39-80쪽.
- 임영광, 「1960년대 『창작과비평』 담론과 번역」, 『동서인문학』 제50호, 건국대학교 동서인문학연구소, 2015, 39-75쪽.
- 전우형, 「번역의 매체, 이론의 유포: A. 하우저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번역과 차이의 담론화」, 『현대문학의 연구』 제56권, 한국현대문학회, 2015, 71-102쪽.
- 조연정, 「번역체험이 김수영 시론에 미친 영향: 침묵을 번역하는 시작 태도와 관련하여」, 『한국학연구』 제38권,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459-490쪽.
- 천정환, 「교양의 재구성, 대중성의 재구성: 박정희 군사독재 시대의 '교양'과 자유교양운동」, 『한국현대문학연구』 제35권, 한국현대문학회, 2011, 281-315쪽.
- 채웅준, 「1950~1960년대 세계문학전집 생산의 문화적 근대성: 출판 장 및 번역 장 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과사회』 제27권 3호,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19, 5-60쪽.

_____, 「번역서의 문화적 정당성과 트랜스/내셔널리티: 1960~70년대 '양서(良書)'의
형성과 변화」, 『대동문화연구』 제128집, 대동문화연구원, 447-485쪽.

최진석, 「냉전기 한국 지식인의 번역 실천: 1960년대 『사상계』의 번역 자료 선별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제85집,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2, 157-192쪽.
한국출판학회, 『한국출판산업사』, 한울아카데미, 2012, 43-48쪽.

Abstract

The Cultural Politics of Translated ‘Bad Books’ in the 1960s

Chae, Woong-Jun(Korean Publishers Association)

The 1960s in South Korea was an era of ‘yang-seo’ (good books). Publishers engaged in symbolic struggles through the production of ‘yang-seo,’ the government devised systems and policies to promote them, and the public actively participated in reading them. However, even amid the cultural politics of cultivation and the process of cultural modernization centered on ‘yang-seo,’ books stigmatized as ‘ak-seo’ (bad books) were continuously produced and consumed. This study focuses on translated ‘ak-seo’ to describe the process by which they were stripped of cultural legitimacy and to explore their sociocultural significance. To this end, it examines the production and circulation of translated books—particularly ‘ak-seo’—from a media sociocultural history perspective, analyzing related discourses and practices through newspapers, magazines, government documents, and the translated books themselves.

The contemporary criteria for ‘ak-seo’ included vulgarity in content and genre; unethical modes of production and circulation, such as re-translation and piracy; and the Japanese origin of the source culture. Translations of Japanese popular fiction were quintessential ‘ak-seo’ as they met all three criteria, flooding the publishing market after the April 19 Revolution ended the state’s anti-Japanese policy and thereby reactivating colonial trauma. This cultural conflict was reconfigured by the 1965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This geopolitical shift reframed the criteria of cultural legitimacy, moving it from the national sentiment of anti-Japanism to the domain of copyright and modern publishing ethics. Simultaneously, this shift exposed the underlying tensions within the ‘yang-seo’ regime—namely, the conflict between the state’s project of cultivation, the market’s commercial logic, and the public’s desire for

pleasure.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cultural politics of 'ak-seo' were dynamically manifested through the interplay of geopolitical order, the projects of the dominant cultural elite, market logic, and the desires of the reading public. Furthermore, by focusing on the hitherto under-examined 'ak-seo,' this study illuminates the limitations and fissures within the 'yang-seo' regime, as well as the commercialism and popular desires that operated outside the discursive framework of 'national culture' and 'modernization.'

(Keywords: bad books, translation and publication, cultural politics of Cultivation, cultural legitimacy, 1960s)

■ 논문투고일 : 2025년 8월 27일

■ 논문심사일 : 2025년 10월 15일

■ 수정완료일 : 2025년 10월 19일

■ 게재확정일 : 2025년 10월 20일